

광주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속도낸다

시·동구·도시공 등 민·관 협력 내년까지 동구 구도심에 구축 교통·에너지·환경·안전 4개 분야

광주시가 동구 구도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역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과 전국 확산을 위한 2022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광주시는 RE10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도시 조성 확산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광주시·동구·광주도시공사·한화시스템(주) 컨소시엄 등 민·관이 협력, 2024년까지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은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4개 분야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와 연계한 데이터 허브 구축 △스마트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조성 등이다.

스마트 교통 서비스는 동구 내 26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설비를 구축하고

실시간 주차현황과 주차정보 등 스마트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산 운영 중인 5개 자치구 스마트주차 정보를 연계, 통합 제공한다.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충전·거래 거점센터로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에 RE100 메가스테이션을 구축, 전기차(EV)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권 거래, 공급인증서(REC) 발급 지원 등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윈윈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 환경 서비스는 펠트(PET)·캔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지능형 자원 순환 수거기 27대를 13곳에 설치,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이용자에게는 포인트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트 안전서비스는 동구지역 22곳에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과 스마트폴을 설치해 시민 안전·실종자 발생에 신속 대응한다.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에는 보행자 인식 스마트 횡단보도 17개를 설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이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을 위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스마트신산업 창업기업 실증 지원, 시민 체험 복합공간 등 혁신성장공간을 조성한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구도심의 노후화된 공공인프라, 주차 불편, 쓰레기 재활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 충전 및 거래 인프라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경서비스를 구축해 넷-제로(Net-Zero) 광주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광주도시공사 '어등산 투자비 반환' 판결 항소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투자비 지급 시기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자체 결정해 항소기로 했다.

11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지난달 25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864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지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5년 넘도록 사업의지가 소극적이어서 유원지 토지매입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이에 도시공사는 내부 논의 끝에 항소를 결정했다. 도시공사 측은 지난 2016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과 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간 체결된 부속합의서를 항소 근거로 삼고 있다.

당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투자비는 유원지개발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

업자가 유원지 부지 토지비를 도시공사에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몇 차례 공모를 통해 호반건설과 서진건설이 차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는 등 유원지 민간개발을 위한 시도는 있긴 했으나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아, 부속 합의를 충족할 만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게 도시공사 측 판단이다.

또한 현재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제안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도시공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항소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결정 금액을 어등산리조트에 가변제 후 소송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현안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와 민간사업자 선정은 본소송과 별도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농산물 안전 관리 강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 여름철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적합 빈발 농산물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고온·다습한 기후에 따른 병해충 발생으로 농약 사용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1일 연구원에 따르면 대상 농산물은 3년간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이나 8월까지 병해충 발생이 많아 잔류농약 검출 우려가 있는 가지·상추·깻잎·부추 등 여름철 부적합 상위 농산물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남지역 생산 농산물을 우선해서 검사를 실시한다.

대형마트·농산물도매시장 유통농산물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여름철 다소비 농산물을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22년 여름철 우려 농산물 검사에선 상추와 고춧잎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생산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해 회수·폐기 등 행정 처분토록 했다.

최항지 기자

전남도,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29곳 선정... '전국 최다'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되면서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전국 134개 마을이 응모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대면 평가를 통해 108곳을 선정했다.

전남에선 29곳(전국 26.8%)이 선정돼 국비 435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주민이 마을의 필요 사업

을 기획·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빈집·노후주택 정비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올해 선정된 29개 마을은 2024년부터 4년간 마을 한 곳당 15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최항지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0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도지사-청년 소통간담회'장에서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청년 핵심 리더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지방시대 청년의 힘과 지혜 모아 달라"

제2기 호남청년아카데미 개강식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아 청년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남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제2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민선8기 도지사 역점시책으로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청년 핵심리더 육성을 목표로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출범식과 함께 제1기 교육생

89명을 배출했다. 수료생 전원이 '청년 서포터즈단'으로 위촉돼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2기 아카데미 개강식을 했다.

개강식에는 차영수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조옥현 교육위원장, 박문옥 도의원, 목포 부시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개강식에서 청년들에게 전남 도정 방향과 전남의 잠재력을 소개하고,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재강 교육생 대표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의 역할과 청년 리더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며 "청년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

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소통간담회를 주재한 김 지사는 "청년이란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다"며 "지역 고유 강점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아 청년의 힘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공감하고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주제 강연과 현장 학습을 포함해 총 4회차로 구성됐으며 오는 7월22일까지 진행된다. 최항지 기자

광주시의회, '광주다움 통합돌봄' 포럼 내일 공동개최

예결위서 '통합돌봄 새로운 장...' 돌봄 사각지대 해소·비전 제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돌봄서비스 체계 혁신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관련 단체들과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공동으로 '광주시 통합돌봄의 새로운 장을 펼치다'라는 주제의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

다. 포럼 참여자들은 전국 최초로 시행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공유하고 향후 국가 돌봄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석재은한림대 교수가 '통합돌봄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석 교수는 선행 연구와 다른 국가의 경험을 통해 통합돌봄 성공 조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주제발표에서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커뮤니티케어 4년의 경험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제에 이어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과 이인희 안산시 지역통합돌봄팀장의 지역 통합돌봄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김수완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 패널토론에서는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 권현정 영산대 교수, 오단이 강남대 교수,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 교수, 윤종성 광주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의 개별 토론이 준비돼 있다.

정무장 광주시의회 의장은 "포럼에서 사례를 공유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급증하는 돌봄 수요 혁신과 통합돌봄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해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